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사업들의 현황과 개선방안 - 용자지원을 중심으로

정승일\*

### 1. 서론

우리나라 정부는 이미 1980년대부터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사업을 전개해왔다. 주로 대기업들에 지원되던 기술혁신 정책금융은 1990년대에는 WTO 가입을 전후하여 중소기업 위주로 재편되었고,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고 있다.

정책금융이란 출연보조금과는 달리 지원자금의 상환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원리상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 정부는 출자지원, 용자지원, 신용보증지원의 3가지 축으로 구성된 정책금융을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정부의 출연보조금 지원에 의한 연구개발 성공률은 78% 수준으로 높으나 이렇게 개발된 기술의 상업화 혹은 사업화 비율은 35%로 저조하며, 이렇듯 신기술의 사업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기업들은 자금부족 문제를 들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규모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논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참여정부는 2005년 이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용자지원과 신용보증지원을 크게 늘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책적 금융지원이 수혜 중소·벤처기업들의 정책자금 의존도를 과도하게 높이고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

\* 기술경제연구센터 부연구위원(e-mail: sijeong11@stepi.re.kr)

**정책초점**

〈표 1〉 기술혁신 정책금융 사업, 2005년

(단위: 백만원)

주무부서	지원방식	기술혁신단계	사업명	2005년 지출액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진흥공단)	융자	개발, 사업화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 지원 중소벤처창업 지원 창업투자조합 출자	92,441
	융자	개발, 사업화		428,340
	출자	개발, 사업화		150,000
산업자원부	융자 출자	개발, 사업화 개발, 사업화	산업기술개발자금 융자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출자	100,000 3,000
정보통신부	융자	개발, 사업화	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195,000
과학기술부	융자	개발, 사업화	연구개발 융자사업	88,000
특허청	융자	개발, 사업화 개발, 사업화	국제출원 촉진 특허기술이전 촉진	1,173
	융자			914
문화관광부	융자	개발, 사업화	문화상품개발 융자	21,546
환경부	융자	개발, 사업화	재활용산업육성 융자	70,000
여성부	융자	개발, 사업화	여성기술인창업자금 지원사업	10,000
합 계				1,160,41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05)

시키는 등 오히려 경쟁과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김현욱 2004, 기획예산처 2006) 이에 참여정부는 2004년과 2005년에 제시된 중소·벤처 종합대책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일반으로부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집중시키고 있으나 여전히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성과 효율성은 의심받고 있는 형편이다.

본 글의 목적은 현재 효과성과 효율성이 의심받고 있는 기술혁신 정책금융 지원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과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2. 기술혁신 정책금융의 전반적 현황**

기업의 기술혁신과 직접 연관된 자금을 기술혁신 금융으로 정의할 경우, 2005년 현재 8개 정부부처가 8개의 기금과 2개의 특별회계를 통

해 마련된 재원으로 13개의 기술혁신 정책금융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지원액은 2005년도에 1조1,600억원에 달했고 대부분은 융자 지원이며 출자지원은 1천700억에 달하였다(신용보증지원 제외).

이중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는 융자사업이 전체의 사업비 지출의 57.4%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정보통신부(16.68%), 산업자원부(8.81%), 과학기술부(7.53%), 환경부(5.99%), 문화관광부(2.61%), 여성부(0.86%), 특허청(0.18%)의 순위로 이어지고 있다.

**3. 기술혁신 융자지원 사업들**

1) 5대 기술혁신 융자지원 사업의 현황

기술혁신 정책금융 사업에서 - 신용보증지원을 제외할 경우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 정책초점

〈표 2〉 5대 기술혁신 용자사업

부처명	관리기관	기금명	사업명	사업개시 연도
산자부	6개 업종별 진흥회	산업기술개발자금	산업기술개발자금용자	1986
정통부	정보통신 연구진흥원	정보통신진흥기금	응용기술개발지원	1993
과기부	한국 과학재단	과학기술진흥기금	연구개발용자사업	1992
중기청	중소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및 산업기반기금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 중소벤처창업지원	2000 1997

것이 용자지원 사업이다. 여기서는 그 사업규모와 사업방식 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5개의 기술혁신 용자지원 사업을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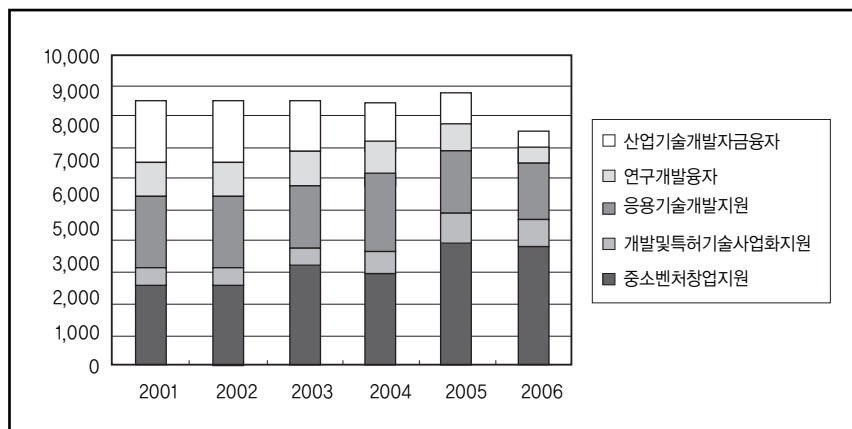
이들 5개 용자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2001년 이후 2005년의 시기에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의 2개 기술혁신 용자사업의 사업비가 2004년 이후 크게 늘고 있으나 산자부(산업기술개발자금용자), 과기부(연구개발용자), 정통부(응용기술개발지원)의 용자사업비 규모는 2003년~05년 이래 감소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2004년과 2005년에 제시된 중소·벤처 종합대책이 있다. 그 대책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집중되고, 과기부와 산자부 등 여타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기금 용자사업은 상대적으로 축소 혹은 폐지되고 있다.

### 2) 용자지원방식 차이와 기술담보대출의 확대

기술혁신 용자지원은 기술담보대출과 일반

〈그림 1〉 5대 기술혁신 용자사업의 변천 추이, 2001-2006(단위: 억원)



## 정책초점

담보대출, 순수신용대출의 관점에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담보대출의 경우, 신청기업은 취급은행에 물적 담보를 설정하거나 또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담보대출의 경우, 취급은행은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가 수행하는 기술담보 가치평가에 따라 확인된 보증액의 보증서를 담보로 용자지원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순수신용대출이란 아무런 담보 혹은 보증서 없이 용자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정부의 용자지원 중 신용대출 형태로 제공되는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 자금과 그리고 중소벤처창업지원 자금이다.

5대 기술혁신 용자사업 중 2005년 현재 일반담보대출만을 취급하는 사업은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자금 뿐이며, 나머지 4개 사업은 모두 기술담보대출(기술평가보증부 대출)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그 밖의 기술혁신 용자사업들은 대부분 일반담보대출 방식으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단지 문화산업육성기금의 문화상품개발용자사업만이 기술담보대출 방식을 병

행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특허청의 특허기술이 전사업(용자)는 일반담보대출 없이 순수하게 기술담보대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용자지원이 일반담보대출 방식으로 수행되는 것은 최근 여러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부동산 등 일반적인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비록 그것이 기술혁신형이라 할지라도) 시중금융기관으로부터도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까닭에 시장실패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정부의 지원이 굳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부동산 등 담보능력 부족으로 시중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된 까닭에 정부의 정책금융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문은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창업초기의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또한 아직까지 재무제표와 수익성에 대한 track record가 형성되지 않은 까닭에 시중금융기관들의 순수신용대출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따라서 시장실패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표 3〉 용자지원 방식의 차이(2005년)

	정책자금 용자사업	일반담보 대출	기술담보 대출	순수신용 대출
5대 기술혁신 용자사업	과학기술진흥기금(과기부) 산업기술개발자금(산자부) 정보통신진흥기금(정통부) 중산기금-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 중산기금-중소벤처창업지원	○ ○ ○ ○ ○	○  ○ ○ ○	   ○ ○
기타 기술혁신 용자사업	산업기반기금(산자부) 환경개선자금(환경부) 재활용산업육성자금(환경부) 문화산업육성기금(문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문광부) 특허기술 이전사업 용자(특허청)	○ ○ ○ ○ ○	   ○ ○	

## 정책초점

이들이 가진 기술력 및 미래사업성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기술평가보증(기술담보) 융자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일반담보대출 방식의 융자지원을 줄여나가거나 중단하는 대신 기술담보대출의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다. 일반담보대출로만 지원되는 산업기술개발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2008년 말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연구개발융자사업의 경우 1997년도부터 기술담보대출을 도입하였는데, 담보력이 취약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의 접근이 힘든 일반담보대출은 정책수요가 줄어든 까닭에 일반담보대출은 비중이 점차 줄어들어 2005년의 경우 총 880억원의 지원규모 중 일반담보대출은 350억원, 기술담보대출은 530억원이었으며, 그리고 2006년도에는 일반담보대출이 완전히 폐지되어 100% 기술담보대출로 지원되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응용기술개발지원 사업의 경우, 2002년 하반기에 기술담보대출을 도입하였고, 2003년에는 전체 지원액의 90.9%를, 2004년에는 61.1%를 기술담보대출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2005년에도 50% 이상의 비중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P-CBO 관련 구조조정으로 기술평가보증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기술보증기금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기술담보대출이 비율은 41.4%로 하락하였다가, 2006년도에는 기술보증기금의 구조조정 완료 및 기술평가보증지원 확대 방침에 따라 전체 지원의 52.6%를 기술담보대출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기술담보대출 방식의 융자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진공의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와 중소창업자금지원사업과 같이 순수신용대출

방식 위주로 운용되는 정부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미 기술담보대출을 도입하였지만 아직 그 비중이 아직 크지 않은 기술혁신 융자사업들의 경우 그 비중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담보대출에 따른 손실을 적극적으로 보전함으로써 기술신용보증기금 측의 위험 부담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기술평가보증(기술담보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평가 및 보증제공의 주체이자 기술담보대출 지원의 부실화에 따른 손실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기술보증기금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평가보증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측의 취급손실(대위변제)을 융자지원을 수행하는 정책기금 측에서 적극적으로 보전하여 위험을 분담(risk sharing)할 필요가 있다. 이미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연구개발융자지원의 경우 2001년부터 기술담보대출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측의 손실을 동 사업 취급으로 인한 부실화를 통계에 기초한 보험료 방식(융자잔액 기준 연 2.03%)으로 보전해준 결과 기술보증기금 측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한 바 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사례를 기술담보대출을 이미 취급하고 있거나 앞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여타 기금들에 확산할 필요가 있다.

### 3) 중진공의 신용대출 확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부의 융자지원 사업 중 유일하게 아무런 담보 혹은 보증서 없이 신용대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중진공의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 자

## 정책초점

금과 그리고 중소벤처창업지원 자금이다.

중진공은 현재 전체 용자사업 중 직접대출 비중을 2001년 10.7%에서 2004년 14.7%, 그리고 2005년 27.6%로 급격하게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과 2005년에 마련된 중소·벤처 기업 대책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2007년까지 중진공의 직접대출 비율을 7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물론 중진공의 직접대출은 높은 순수신용대출(무담보, 무보증) 비율과 대출절차의 신속성으로 수혜기업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특히 100% 직접대출이며, 그중 80~100%를 순수 신용대출로 제공하는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 용자사업의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중진공의 직접대출·순수신용대출 확대에 대한 비판 역시 확대되고 있다. 정책자금 취급은행에 의한 대리대출·순수신용대출과는 달리 중진공에 의한 직접대출·순수신용대출의 경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정책목적 달성에 효과적이거나 용자지원의 부실화 발생시 전액 국가부담으로 귀착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까닭에 신용대출 제공 여부를 제대로 판정하기에는 여신심사를 위한 인원과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문적 금융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데 따른 자금 운영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중진공의 현재 직접대출의 부실화 비율은 아직은 3~4%에 불과하나 보통 지원받은 기업들의 부실징후가 나타나는 지원 4~6년차에는 부실화 비율이 크게 늘어나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중진공의 기술평가능력은 기술보증기금 등 여타 기관의 그것에 비해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할 때, 앞으로 중진공의 용자사업을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능력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중진공의 대표적인 기술혁신 용자사업인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와 그리고 중소벤처창업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직접·순수신용대출의 일방적 확대보다는 직접·기술평가보증서부 대출의 확대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중진공은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의 경우 2004년부터 동 사업에 있어 순수신용대출 이외에 기술평가보증서부 대출도 추가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동 사업의 80% 이상이 순수신용대출이므로 앞으로 기술평가보증서부 대출의 비중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 4) 기술혁신 용자지원의 운용효과와 존속의 필요성

최근 일부에서는 정부의 각종 용자지원 제도의 축소 혹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조영철 2005, 기획예산처 2006). 그 근거로 그들은, 첫째, 전반적인 시중금리 하락으로 정책자금과 일반여신간의 금리차가 과거에 비해 크지 않다, 둘째, 신용보증제도가 발전하고 있으므로 정책기금 용자로 이중적 정부지원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셋째, 정책기금의 폐지를 통해 획득되는 재원을 저출산 고령화 등 복지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시중은행 여신금리가 낮아졌지만 담보력이 약한 기술혁신 중소벤처기업

## 정책초점

들은 아예 대출심사 자체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 시중은행으로부터 소외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은 은행권보다 높은 금리를 요구하지만 대출조건이 덜 까다로운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모르고 있으며 이들이 체감하는 시중금리는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 금리이다. 또한 시중은행의 대출만기가 일반적으로 1년인데 반하여 정책기금 용자의 지원기간은 최하 5년, 최장 8년이므로 아직 매출과 수익이 안정화되지 않아 원금상환이 큰 부담으로 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이다.

둘째, 신용보증 지원과 용자지원은 서로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자의 공존은 결코 중복지원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앞에서 본 것처럼 기술혁신 용자지원 사업이 일반담보 혹은 순수신용대출 방식이 아니라 기술평가보증지원과 결합할 때 발생하는 여러 장점들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셋째, 또한 일부에서는 정책기금 용자사업의 폐지와 이차보전 방식으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경우 시중은행들은 대출자산에 대한 바젤(BASEL) 규제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특히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용자지원을 크게 줄일 것이다. 따라서 이차보전 방식의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기금 용자사업 폐지론자들은 용자지원 사업들의 운용배수(소요예산 대비

사업비 규모)가 1에 불과하므로 비효과적이라는 견해를 펼치고 있는데, 하지만 필자의 계산에 따르면 기술혁신 용자지원의 운용배수는 1이 아니라 최하 9, 최대 13이며 따라서 효과성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기술혁신 용자사업들은 앞으로 계속 유지될 가치가 있다(신태영 외 2006).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금융시장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정책적 용자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일반담보대출 방식의 기술혁신 용자사업들은 축소 혹은 폐지될 필요가 있으며, 시중은행들로부터 소외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술담보대출 방식의 용자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 4. 시중은행의 기술력평가 신용대출과 지원 방안

최근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확대의 한계에 직면한 시중은행들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같은 신규고객 발굴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기술평가금융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이 경우 은행들은 자체적인 기술평가 및 혁신기업 선별능력 결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술성 평가를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업무를 기술보증기금과 기술거래소와 같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2006년 8월 말 현재, 4개 은행이 기술평가 여부 혹은

〈표 4〉 시중은행의 기술력평가 여신상품의 현황(계획치)

은행명	기술금융상품	'06년 전체	하반기
국민은행	이노비즈론	6,000억원	3,000억원
기업은행	위너스론	3,000억원	842억원
신한은행	사회책임경영대출 등	2,000억원	2,000억원
우리은행	하이테크론	3,000억원	2,000억원

## 정책초점

이노비즈 선정 여부와 결합된 기술평가 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한편 산자부는 이들 4개 시중은행과 공동으로 기술평가와 연계하여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을 2006년 8월에 발표하였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평가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등 6개 기관인데, 이들은 모두 동일한 기술평가 표준모델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기술평가서를 발급하고,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4대 협약은행은 기술평가등급에 따른 가산점 부여와 함께 자체적인 여신심사를 토대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순수신용대출을 제공한다. 이 때 산자부는 기술평가를 원하는 기업에게 기술평가비용의 50%(200만원)를 지원한다.

2006년 하반기에만 이들 4개 은행은 8천억 원 가량의 기술력평가 신용대출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게 공급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동시에 향후 이들 4개 은행은 매년 1조원 이상의 기술평가 신용대출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기술평가 여신상품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시중은행들의 기술평가 신용대출이 앞으로 안정적인 기초 위에서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현재 시중은행들은 기술평가 대출의 부실화에 따른 모든 손실책임을 은행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순수 신용대출 방식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을 아직 track record가 거의 형성되지 않은 창업초기 기업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보여주

고 있다. 이는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는 시중은행의 처지와 게다가 외환위기 이후 강화된 은행건전성 규제들을 준수해야 하는 처지를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태도라고 판단된다. 더구나 내년부터 시행되는 바젤Ⅱ규제로 인해 은행들의 기업대출 리스크 관리가 더욱 엄격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중은행들이 기술평가대출 부실화의 손실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순수 100% 신용대출보다는 정부가 적절한 부분보증을 통해 기술평가 대출의 부실화에 따른 손실을 부분적으로 짊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지원받은 기업들의 부실화 여부 판정과 그리고 그에 따른 track record의 발생에 이르기까지는 최소한 3년의 과도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아직 기술평가서의 신뢰성에 대한 track record가 형성되지 않은 3년 정도의 과도기 혹은 정착기 동안에는 정부가 부분적으로 보증지원을 병행하여야만 은행들의 신용대출이 점진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때 정부의 보증지원 방식은 지금까지와 같은 직접보증이 아니라 선진국형의 간접보증 혹은 재보증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보증지원에 시장원리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자산을 담보로 하는 자산유동화 증권의 발행 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이 그것을 (부분)보증하는 독일과 유럽연합의 정책금융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중은행들의 기술력평가 신용대출 사업에 관한 한, 이차보전 방식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바젤Ⅱ규제로 필연화될 기업의 신용등급 양극화와 그에



## 정책초점

따른 대출이자율 차등화 심화 문제를 생각할 때, 기술력 이외에는 변변한 담보도 없고 재무 구조와 수익구조가 아직 확고히 안정화되지 않은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해 은행들이 요구하는 대출이자율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 【주】

- 1)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폐지와 이의 이차보전 지원방식으로의 전환, 시중은행 기술력 평가 신용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은 전혀 다른 사안이며 양자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대상은 주로 업력 3~5년 미만의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인데 반하여, 시중은행 기술력 평가 신용대출의 대상은 주로 업력 3~5년 이상의 중소벤처기업들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김현욱(2004),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국회예산정책처 (2005),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
- 기획예산처(2006), 「정책자금, 중소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 산업 - 중소기업분야」, 2006월 3월22일 보도자료.
- 재정경제부(2004), “중소기업 금융 현황 및 대응방안”,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 조영철(2005),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재정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05 세입·세출 결산 분석』, 국회예산정책처.